

조국사태 → 타다 기소... 與·檢 신경전은 '현재진행형'

타다, 승합차 예외조항 근거 영업 與, 검찰이 혁신성장 가로막아 정계 "檢개혁 신경전 타다로 옮겨"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모양새다. 검찰이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자 청와대·정부·여권관계자들이 잇따라 유감을 나타낸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유사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당혹

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날, AI(인공지능)분야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즉 여권은 검찰이 혁신 성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김 실장에 한정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때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가 앞으로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회에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검찰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며 "사법부가 판단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의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여권과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며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을 방증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과 검찰의 1차 무대였던 조 전 장관 사태가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로 일추 마무리되자 '타다 기소' 등으로 다시 번진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왜 한마디씩 하겠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회피'가 가장 큰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 대표 표는 지난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웨라튼서울 팰라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참석해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우리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열린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와 장지로 이동하기 전 눈물을 닦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은·프란치스코 교황, 文에 조의문

靑 "金, 文 대통령에 위로 메시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각각 조의문을 보냈다.

우선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 조의문은 지난 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 받았다. 또 그날 밤 늦은 시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 조의문이다. 천주교 부산교구는 31일 "문 대통령 모친 강 여사 선종을 위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성하 위로 메시지가 주한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천주교 부산교구청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부산교구청이 공개한 조의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저는 대통령님의 사랑하올 어머니 강 데레사 자매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며 "이 슬픈 시기에 영적으로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교황의 조의문은 조영만 세례자 요한 신부가 번역공증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31일 강 여사

장례미사 후 안장식에서 "어머니께선 평소 신앙대로, 또 원하시던 대로 많은 분들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됐다. 피난 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셔서 조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조의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도 했다.

한편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상가를 찾아 심심한 조의를 표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문 대통령 상가를 찾았다"며 "문 대통령도 아침 일찍 멀리까지 찾아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문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며 건강이 안 좋아 수술 후 재활치료중인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내지 형집행정지를 간곡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홍 대표 요청에 문 대통령은 "구치소내 책상 반입 및 병원 입원치료 등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미소로 화답했다. /우승준 기자

객관·투명성 살려 vs 학교 교육 파행우려

법조계 '정시 확대' 찬반공방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공정성 확보 위해 50% 확대해야"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쳐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법조계에서도 이어졌다. 객관적인 지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 위주 전형, 즉 공정한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위주 교육의 문제점이 불거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오후 서울역 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 입시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의 사회는 박경호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토론에는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 부교육감),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시 확대의 당위성을



대한변호사협회는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입시, 논문, 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현경 기자

강조했다. 먼저 강 교수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정시비율을 50%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시와 정시 비율을 현행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수시제도의 과점상의 의혹을 줄이고 정시의 객관성과 투명성의 장점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생부에 고교명 삭제 ▲3불 금지 원칙 준수 ▲특목고·자사고·외고 전형구분 ▲학생부에서 비교과 활동 축소 등을 제시했다.

반면,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 부교육감)는 정시 확대가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으로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역대학이 입학자원의 급속한 감소로 늘어나

고 있는데 정시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모든 대학에 주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위주로 학생을 뽑던 과거에도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재수생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빚발쳤었다"며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시를 일정비율(예, 50%) 이상 되도록 대학에 권장하려면 제 31조에 명문화해야 한다. 즉 조항을 신설해서 '일반전형에서 제 3항에 의한 시험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을 100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내년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과제 33건 논의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

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